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76
----------	------

발의연월일 : 2024. 11. 14.

발 의 자 : 정태호 · 이수진 · 박해철
전현희 · 복기왕 · 김주영
박홍배 · 김남근 · 송재봉
민병덕 · 안호영 · 김민석
김현정 · 박균택 · 김 윤
이용우 · 서영교 · 김성환
김성희 · 서영석 · 어기구
김태선 · 이건태 · 윤후덕
이재관 · 한정애 · 남인순
백승아 · 최기상 · 추미애
송옥주 · 김영환 · 박홍근
이연희 · 임호선 · 허 영
조승래 · 정진욱 · 김원이
이인영 · 정동영 · 박정현
박지원 · 이광희 · 최민희
진성준 의원(46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함(안 제9조).
- 나.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공공기관의 기관통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4조).
- 마.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언론계·학계 및 노동계”를 “언론계 및 학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국무총리”로, “11인”을 “10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을 각각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사람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과반수가”를 “3분의 2

이상이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중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산처분) 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승인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자산처분의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및 국회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 · 경제계 · <u>언론계 · 학계 및 노동계</u> 등 다양한 분야에서 <u>기획재정부장관의</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4. ----- ----- ----- ----- <u>언론계 및 학계</u> ----- <u>국무총리</u> ----- --- <u>10인</u> -----
<u><신 설></u>	5. 「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 제10조제2항에 따른 <u>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u>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2인</u> 이내의 사람
② <u>제1항제4호의</u>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u>제1항제4호 및 제5호</u> ----- ----- -----.
<u><신 설></u>	③ <u>제1항제4호의</u> 위원을 위촉

<p>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p> <p>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 규 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 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 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 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 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p>	<p><u>할 때에는 여성,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 ----- ----- ----- ----- -.</p> <p>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제4호 및 제 5호-----제5항----- ----- ----- ----- -----제5항제1호-- ----- --.</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p>
---	--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

-----제4호 및 제5호-----

-----3분의 2 이상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나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개회한다. 이 경우 개회일 7일
전까지 개회 일시, 개회 장소,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_____

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
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신 설>

-----이를 지체 없이 공개
하여야-----.

--.

제10조의2(공공기관 임금·근로

조건 결정위원회)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운영위
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공
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
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
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
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
로한다.

③ 위원회는 각 과반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⑤ 위원회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중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 사업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⑥ -----제4항-----제5항-----

-----.

제14조의2(자산처분) 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승인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u>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